"외교 초당적 대응 필요… 추경 가능한 신속히"

NEWS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G7' 결과 공유
경제 어려움 공감…안보·외교 상황 점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취임 18일 만인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저는 가능하면 (여야 지도부를) 많이, 빨리 뵙자는 입장이어서 한번 뵙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과라면 그렇지만 이번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도 말씀드리고 싶다"며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G7이 관심을 가진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많은 정상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가) 잘 조율해 가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따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뿐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며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 외교 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우리가 추경안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책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오늘 자리에) 흔쾌히 함께해줘 감사드린다. 하실 말씀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하시면 저도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은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므로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의혹 등과 관련해 "지금 언론에 나오는 상황만 보더라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며 후보자 지명을 재고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총리 후보자를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라고 비판하며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기 전인데 후보자가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고, 정부 부처의 차관을 대동하고 행사를 나가는 일도 (보도로) 나오고 있다"며 "벌써 총리가 다 되었다고 국민들이 느끼실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인사 청문 대상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며 "역대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알지를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국민께 보일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또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도 국내 최초 해상풍력 박람회…13GW 대도약 선포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지역 기자재 공급망 구축 협약 등 체결

전남도가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동부권 13GW 해상풍력 개발 비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남도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를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지역 기자재 공급망 강화, 발전사-기업 간 협력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사)전남풍력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국내외 해상풍력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 전남 8개 시·군 단체장을 포함해 100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 해상풍력 허브로의 담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박람회는 해상풍력 선도 지역으로서 전남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행사 첫날에는 전남 동부권 13GW 해상풍력 비전이 공식 발표됐으며,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과 지역 기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함께 이뤄졌다. 이와 함께 발전사 프로젝트 현황과 지역 기업 우대 방안이 발표돼 산업 전반에 대한 방향성이 공유됐다.

이튿날에는 여수·고흥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계획이 소개됐고, 전남지역 기자재 업체와 발전사 간 150건이 넘는 1:1 납품 상담이 진행됐다. 실질적 비즈니스 연계가 활발히 이뤄지며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다.

특히 명운산업개발, 유탑건설, 케이윈드파워, 바다에너지, 퍼시피코, COP, 레노바, 한화오션 등 주요 발전사와 지역 기자재 업체들이 8건의 MOU를 체결하며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보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전남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누구보다 앞서 준비해왔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해상풍력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남이 가장 적합한 지역임을 입증해 그 역할을 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배달앱 운영사, 가맹점, 라이더 관계자 등과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 공공배달앱 띄워 골목상권 살린다

강기정 시장 주재 '골목경제 회의'서 공공배달앱 논의
가맹점 가격할인·운영사 프로모션 강화…이용자 확대

광주시가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골목경제 상황회의'를 열어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황회의에는 강기정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전성호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 대표, 하재욱 슈퍼커넥트(위메프오) 대표,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이은행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부 회장, 이영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장, 황지훈 다르다김밥 수완점 대표, 소남식 명백집 북구신안점 대표, 백승호 카페잇샌드 대표, 김대철 바로고 북부지점 대표, 윤세훈 모아콜 광산지사장 등 공공배달앱 가맹점과 운영사, 소상공인,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공공배달앱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프로모션 확대, 가격 할인 등 공공배달앱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공배달앱 활성화가 특정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가맹점, 운영사,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가맹점은 가격 할인 동참을 통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공공배달앱 운영사는 회원·입점업체 확대를 위해 TV 등 온라인 광고와 함께 배달가방 스티커와 현수막 무제한 제공 등 자체 프로모션을 확대해 사용자 유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및 소비자 단체는 공공배달앱 이용 캠페인을 벌여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광주 공공배달앱은 신한은행 '땡겨요'와 '위메프오'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만 5800여개 가맹점, 누적 주문 198만건, 누적 매출액 488억원을 올렸다.

강기정 시장은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국비 지원 등 재원 확보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국비 지원을 꾸준히 건의해 이미 정부 1차 추경에 국가 직접 사업비 650억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가 직접 사업비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광주시는 정부 2차 추경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할인쿠폰 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비 매칭(50%) 지원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8일 실·국장 및 공공기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골목경제 상황회의'를 개최, 기관별 소비촉진과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